

전남도,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속도

전남 에너지주권 지키자

1GW 규모 2037년까지 25개동 지역 내 생산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력망 등 기반 조성·정책 논의
변전소·송전선로 조기 구축 추진
"에너지 생산·소비 한곳서" 실현

전남도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한 만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한 기업 이전 및 지방 소멸 극복과 에너지주권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진행했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는 해남군 구성지구에 위치한 솔라시도 RE100 전용산업용

지 내 48만평 규모에 조성될 예정이다. 규모는 1GW로, 전남도는 2037년까지 40MW급 데이터센터 기준 25개동을 건설하는 등 단계별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등과 재생에너지기반 투자 및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 중 삼성물산과 LG CNS, NH투자증권과 보성산업 등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남도 또한 같은 해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투자 유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에는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와 실사용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나섰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변전소 건설이 확정돼 조건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TF회의에서는 해남 솔라시도를 데이터센터 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망, 상수도, 통신 등 관련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감도.

BS산업 제공

실제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송변전설비 확충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확보가 필수적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동하고 일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력 소비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로 보낼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한전에 전력공급망안 법률질의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남도 또는 SPC의 손실보전을 전제로 전력설비를 구축하는

데 협의했다.

이어 10월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과 함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54kV급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조기 시행할 예정으로, 전남도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높으나 전력을 쓸 기업이 없어 수요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전남에 전력소비량이 높은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민들의 반대가 높은 송전선로 건설 및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또한 데이터센터파크 구축을 통해 계통포화 해소 및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및 국가인공지능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성 전남도 신산업과장은 "오는 2026년 하반기 변전소 착공,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기 7개, 2기 6개, 3기 12개 등 데이터센터 단계별 추진을 통해 2037년까지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윤 대통령, 진술 거부...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법원 자료 제출...체포시한 정지
"조사 가능...구속영장은 결과 이후 결정"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다 입장이므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자료를 접수했으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

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은 통상적으로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 중 대상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의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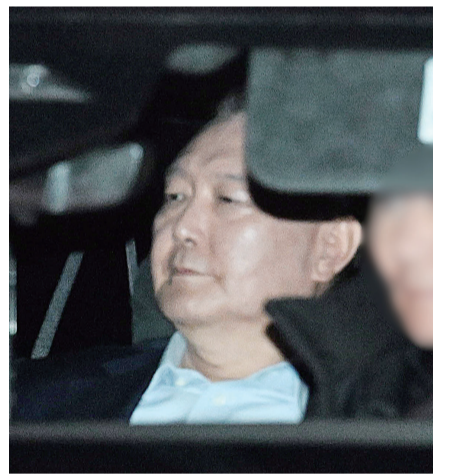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HANJIL EXPRESS GROUP
HANJIL EXPRESS FERRY

완도·제주항로 다시 돌아온 완도 오전출발 카페리

골드스텔라호 취항!

2025년 1월 15일 첫 운항!

최단거리 항로 / 운항시간 2시간 30분

국내 역대 최고급 카페리

완도발 오전 09:20 출항
제주발 오후 16:00 출항



주몽채 회장
(주) 송죽레저관광
(유) 현대관광

- 여객정원 948명
- 차량정원 343대 (승용기준)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송죽레저관광 T. 064) 747-8000 F. 064) 747-2590 H. 010-6865-7000

현대관광 T. 061) 245-0091 (목포) F. 061) 245-0309 (목포)